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기여에 관한 고찰

김관준*

요약 우리는 체류외국인이 153만 명에 이르는 다문화사회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관한 담론도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고 정부지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민자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고 재정적·환경적 한계로 대상자 모두에 대한 사회통합차원의 다문화정책은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능력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아닌 일방적 지원과 부처간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사회통합정책이 성공하려면 다문화사회에 신속한 대응과 적응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분담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문화사회 구성원이 종래 단순기능 분야 종사자 중심에서 정치가·교수·공무원·결혼이민자·유학생·투자가 등 활동유형별로 다양화 되고 있다. 게다가 이주자의 유입증가는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고 부족한 경제활동 인구를 충원시키면서 인종적·문화적 갈등을 피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 동안 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담론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대안 없는 문제점 제기는 공염불로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비판과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의 이민정책은 사회통합적 차원의 이민정책이 되어야하고 재외동포를 우수인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과거의 이민정책이 국경심사와 체류관리에 집중이 되어 규제와 통제였다면 앞으로는 사회통합과 경제적 효과를 가미시켜야 하는 복합적 이민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회통합정책은 이주자 자녀의 교육과 정체성, 현역입대의 영향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자 순리이며, 그 나라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민자와 원주민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해야 하며,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다문화사회, 인구 및 인력 감소, 외국인 노동자, 이주자,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계명대 이민다문화사회학과, charleskpi@hanmail.net

1. 서론

다문화사회란 동일한 혈통과 문화를 추구하는 단일문화에 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며, 국제적으로 자원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인종간의 공존과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다문화사회를 이끄는 사회구성원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내지는 국제이주자를 들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1).

2011년 국제이동인구는 2억 1400만 명이었고 2050년 4억 5천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2012년 6월 23일 인구 5천만 명에 1인당 GDP 2만 달러가 넘어 세계 '20-50클럽'¹ 국가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을 왕래한 이동인구는 50,322,097명에 달했고, 그 중 한국인이 28,136,628명으로 55.9%를 차지했으며 외국인이 22,185,471명으로 44.1%가 된 것을 보아도 이제는 외국으로 이동하는 한국인 못지않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다문화 진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 결혼이민자만 보더라도 2011년 약 18만 명에서 2020명쯤 35만 명으로 증가하고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전체인구의 5.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상에 비춰볼 때 10년 후 고령사회가 될 한국이 다문화 현상을 거부한다면 경제 발전의 동력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중앙SUNDAY 미래탐사팀, 2012: 362).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1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민이 하루 빨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인종·다문화가 혼재하고 다종교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는 상

1 20-50클럽은 1인당 소득 2만 달러(20K, K는 1000을 나타냄), 인구 5,000만 명(50M, M은 100만을 의미)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들을 뜻한다. 국제사회에서 1인당 소득 2만 달러는 선진국 문턱으로 진입하는 소득기준으로, 인구 5,000만 명은 인구강국과 소국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각각 통용된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20-50클럽국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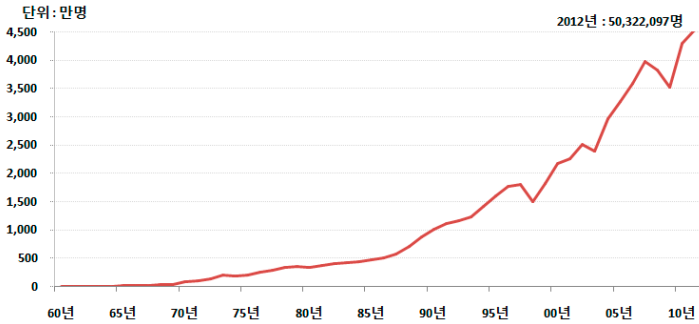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왕래 숫자 추이

자료: 법무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항임을 감안할 때 다문화사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고대 로마가 천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국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였고, 그 나라 국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과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서정명, 2012: 102).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반다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입에 비판적이거나 거부감을 갖는 등 대안의 제시보다 갈등을 부채질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외국인 유입이 우리 노동시장을 점유하고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남자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에서도 이주자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 말해준다. 이탈리아 출신 고넬료는 부유한 군대장이었고, 그리스 출신 이방 여성 루디아는 고넬료와 같은 재력있는 이주자였다. 오늘날 한국의 부와 경제력이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듯이 당시 유럽·소아시아 지역에는 깊은 빈부격차 속에서 이주자의 노력과 영향이 컸다(김혜란·최운영, 2013: 14, 192).

이처럼 다문화사회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어 국제인구의 이동도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래서 누구도

평생을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만 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가간 국경이라는 장벽이 무너지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고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에 필자는 다문화사회의 갈등환경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국제 이주자들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점을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다문화사회 형성의 배경

이주자의 국제적 이동은 동서고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대사회에 와서는 국제교류가 증가하고 국가 간 빈부격차와 임금격차가 커지면서 이른바 국가간 양극화 현상으로 사업목적 또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다른 국가로 이동해 왔다. 이주자 유입 국가는 노동인력이 필요했고 이주자는 취업 등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력이 필요한 국가의 필요성과 맞아 떨어진 것이다.

1950~60년대에 독일의 제약산업에 근무하던 연구 인력이 미국으로 상당수 이동한 사례가 있다. 서독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사회복지를 확대할 목적으로 의약품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였다. 그러자 제약사들은 영업 손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연구 인력의 급여를 인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연구원들은 연구 대가가 충분히 주어진 미국으로 대거 이주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의약품 가격 상한제가 없었고 신약개발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주어졌던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제약산업에서 세계적 선두주자가 되었고 독일은 제약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국민일보, 2013.7.5).

또한, 17세기에 프랑스의 개신교도인 위그노 25만 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 네덜란드, 프러시아로 망명했다. 그들은 대부분 숙련된 수공업 기술자들이어서 그들을 받아 들이는 국가에서는 이들의 도움으로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프랑스의 상공업은 크게 타격을 받았다.

한편, 미국에서는 멕시코 등 히스패닉계가 이주자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돈을 벌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중국인 등 아시아 출신 이주자들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히스패닉을 제치고 미국 최대 집단으로 부상했다. 2007년에는 히스패닉계가 54만 명이고 아시아계가 39만 명이었으나, 2010년 미국 이민자 집계 결과 아시아계는 43만 명(36%)으로 37만명의 히스패닉계(31%)를 앞질렀다. 아시아계는 49%가 대졸자로 학력 수준이 미국 전체 평균 30%를 크게 웃돌았다. 2010년 미국의 대학들이 과학 및 공학분야에서 수여한 학위의 45%를 아시아계 학생들이 받았다. 히스패닉계 이민자는 주로 육체노동, 아시아계는 전문직이 많다. 아시아계 이민 가정의 연간 소득은 6만 6000달러(약 7600만 원)로 미국 전체 평균 임금 4만 9000달러보다 높다.

시대가 이렇게 변천하면서 다문화사회는 서서히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제는 다문화사회이자 지구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에는 전쟁이나 내전을 피해서 가족이나 집단이 이웃 국가로 대거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직업적 차원의 글로벌 노마드의 이동이 활발하다. 이들은 기업의 보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활동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하면서 세계 각국을 이동하기도 한다. 글로벌 노마드의 이동에는 기술과 노하우를 비롯하여 경영방식과 문화 이전이 수반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능한 해외인재의 영입으로 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즉, 다문화사회 형성은 국가발전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다문화사회 갈등의 원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인 2004년 75만 명에서 2012년 149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는 2012년 144,498명에서 2020년 249,490명, 2030년에는 439,269명으로 연평균 5.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

표 1. 결혼이민자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인원	122,552	125,087	141,654	144,681	144,498
증감률(%)	↑ 11.0	↑ 2.1	↑ 12.2	↑ 2.1	↓ 2.6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2013,6) www.immigration.go.kr

이민자의 경우 귀화한 이주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진다. 이들은 자국의 고유한 문화와 교육환경 등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를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며, 이보다는 이들과 국민이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조화로운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인구와 노동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주자를 받아들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자들을 국민과 사회적으로 통합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주자로 인한 다문화사회 형성과 그에 따른 국민과의 접촉과 교류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은 피하기 힘들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일방적 지원에 따른 역할별 현상이 나타나고,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전락한 이주자들은 범죄집단에 가담하거나 이주자들이 인종과 임금차별 등을 이유로 집단파업하는 경우도 상존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가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World Competitiveness Year)'에 따르면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에 있어서 한국은 2008년에 55개 대상국 중 최하위였고, 2009년 57개 대상국 중 네덜란드, 홍콩, 아일랜드가 1, 2, 3위를 차지하여 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은 56위로 최하위에 가까웠다(현대경제연구원, 2009: 8).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다문화개방에 대한 견제와 부정적 자세는 우리 국민이 국제사회에 진출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주자의 한국 사

회적응을 돕는 언어와 문화 학습프로그램, 정착지원 프로그램, 취업훈련 및 알선 프로그램, 의료지원프로그램 등이 초보단계에 있다.

오히려 결혼이민자에 대한 능력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원으로 국민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집중하다보니 ‘다문화 시민교육프로그램’ 등과 같은 국민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주자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살면서 자국의 문화와는 다른 이질적인 문화를 접한다. 국민은 그들의 출신국이 어디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선진국 국민에 대해서는 보다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풀고 동남아국가 출신 등 후진국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경계하거나 무시하는 현상을 보인다. 무시나 차별을 받은 이주자들은 반사적으로 한국인에 대해 부정적 혹은 견제 심리적 자세를 취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상황임을 생각할 때 국적,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차별적 대우 등으로 갈등이 빚어지거나 이것이 범죄로 연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은 정보기술 및 교육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9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사용률은 62.2%로 국내 평균 77.6%에 비해 낮으며 그 활동목적에 있어서도 자료 및 정보의 획득, 이메일 사용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가활동이나 학습, 커뮤니티 활동 등 일반적·사회생활에서의 인터넷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전해영, 2010: 8-9).

문화의 다양성을 지닌 다인종의 이주자들이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원주민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이는 이주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원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더구나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국제경쟁의 통합과 무국경화에 대응하여 사업의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해야 하는(황인태, 2008: 193-

194) 상황에서 국제이주자들의 이동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포용할 것인가가 정부가 해법을 찾아야 할 과제이다.

4. 다문화사회 갈등의 문제점

1)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역입대와 정체성

2011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80%이고 중도입국한 자녀의 취학률은 57%에 불과했다. 비교적 높은 연령대에 해당하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다문화 가정자녀로서의 정체성 혼란에 직면해 있고 편견과 차별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거나 입학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교육으로 편입하기 전에 언어과정을 이수케 하는 등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그 대응이 아직 미미하다.

보육원·유치원 때부터 이주자 자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때, 자녀들이 보다 덜 차별을 받으며 일반가정 자녀들과 더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학하기 전 아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 체계가 없어 모국어 형성과정에서 한국문화·사회에 대한 부적응 등 장애 발생으로 장애의 사회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주자들이 이웃 및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주자 자녀교육은 바로 국민의 자녀와 동등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때로는 우리 문화에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장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현역입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만 16~18세 자녀가 2,504명에서 2012년 8,616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들 대부분이 군대를 가기 시작했거나 대기중

표 2.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도	연령별 현황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계
2008	33,140	18,691	3,672	2,504	58,007
2009	64,040	28,922	8,082	6,645	107,689
2010	75,776	30,587	8,688	6,884	121,935
2011	93,537	37,590	12,392	7,635	151,154
2012	104,694	40,235	15,038	8,616	168,583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13.6월).

※ '09년도 자녀수의 큰 폭의 증가는 '09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역입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는 병역을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의무로 인식하고 그들의 현역 입대가 다인종·다문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 확립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에 반해 후자는 그들의 입대는 병역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켜 편익보다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단일민족 주의를 지켜온 한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현역 입대는 단기적으로 보면 수면 아래에서 갈등의 씨앗이 꿈틀 거릴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들이 병역생활을 매일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오히려 일반 사회적 갈등보다 효과적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대신 정부는 신병훈련 단계에서부터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이질적인 문화나 인종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은 확립될 것이다.

2)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응결어

저출산과 고령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으로 경제적·사회적 문제점을 초래한다. 더구나 고령화사회로 전환될 경우 사회복지비 지출증가로 이에 대한 재정보호 문제 등 다양한 대책이 불가피하다(김판준, 2012: 41-42).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2045년에 5천만 명으로 감소하고, 2069년에는 4천만 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뒤 2091년에 3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국제이주자의 숫자는 2012년 150만 명에서 2069년에는 480만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²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3,598만 명에서 2040년에 2,887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같은 기간에 545만 명에서 1,6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2000년 65만 5천 명에서 2010년 47만 명으로 18만 5천 명 감소했으며, 2040년 32만 5천 명으로 두 배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전세계 평균출산율은 2.56%에서 2.10으로 하락한 반면 65세 인구는 7.6%에서 2040년에는 14.2%로 거의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5세 인구는 16%에서 25%로 상승할 것이며 고령화로 경제활력이 쇠퇴하고 재정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소비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고 세대간 분배의 문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모든 연령대의 경제 활동인구는 2010년 2,582만 명에서 2018년 2,668만 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30년에는 2,458만 명으로 축소됨으로써 한국경제의 성장기반이 약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층과 여성, 노령층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11: 1, 4, 5, 15).

외국인 노동인력을 확보하더라도 내수시장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도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지자 중남미 이민을 폭넓게 받아들여 저가의 노동력을 보강한바 있다. 우리나라도 다

2 국제이주자 증가예상 수치는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6만여 명이 증가한 것을 기준으로 임의 산출한 숫자임

수의 젊은이들이 꺼려하는 단순노무 인력의 도입 뿐만 아니라 외국인재 확보가 절실하며, 재외동포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 재외동포 출신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외국인력과 국내인력을 조화시키는 것과 취업연령과 은퇴생활자의 비율 격차를 좁힐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은퇴연령층에 대한 혜택은 축소되고 취업연령층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증가하게 되어 노동인구의 감소와 재정적자로 결국 국가재정의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Daniel Altman, 2011: 13, 111-113). 고령화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역할 부재 현상으로 인해 고독사, 국가의 사회보장지원에의 의존 등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3) 다문화비용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정책

국제이주자의 증가는 사회보장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20% 이상이 저소득가구인 반면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기초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다문화가정이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하며 향후 이들 가정에 대한 지원증가로 복지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현대경제연구원, 2010),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대와 차별, 후진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인종 및 임금 차별 등도 다문화 비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경제 내의 자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되어 내국인 전체의 소득은 증가한다. 계층별로는 외국인과 보완적 관계를 갖는 전문 내국인 근로자와 자본가가 이득을 보고, 외국인과 대체적 관계를 갖는 비전문 내국인 근로자는 손해를 본다. 다시 말해, 외국인 유입은 저숙련 노동의 임금을 하락시키며 고숙련 노동의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현실적으로 외국인력의 다수는 내국인이 선택하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지만,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이 내국인의 고용에 미친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

세하게 부정적이다(유경준·김정호, 2010: 7). 그렇더라도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견제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도 논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다문화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민족단체, 노동조합, 여성단체 등 여러 유형의 사회단체를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경우(Alvin & Heidi Toffler, 2009: 193-194) 다문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190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 대규모 농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멕시코 이주민을 적극 수용하는 등 이민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해왔다(김도해, 2012: 316-319).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탄력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노동 및 인권단체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단속추방 중단, 불법이주민 합법화,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체류기간 연장보장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도 요구하고 있지만(한겨레, 2013.4.29), 고용주 입장에서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보다 5-15% 임금을 적게 주는 정책을 펴왔던 캐나다는 정책을 전환했다. 차별적 저임금 정책은 기업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차원이었다. 그러자 일부 국민들이 해고되거나 취업을 하려는 기회를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을 해왔다. 결국 2013년 2월 30일 캐나다 이민장관은 이러한 저임금 고용정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즉, 국내업체가 고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국내 임금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외국인 노동인력 수급정책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OECD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내국인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4) 이주자들을 일방적으로 소외계층으로 분류

우리사회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3D 업종에만 종사하는 하류층에 속한다는 생각이 팽배하고 그런 이유로 차별과 편견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차이가 있다. 공무원, 교수, 연구원, 변호사, 항공기 승무원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가 장학금과 일자리 등으로 젊고 똑똑한 인재들을 각국에서 스카우트하는 추세도 뚜렷하다(중앙SUNDAY 미래탐사팀, 2012: 364).

이런 환경에서 자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미래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향후 10년 후에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50만 명에 이를 것이고 이때는 다문화사회가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출신도 훌륭한 교육환경에서는 자녀의 장래진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녀의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결정하게 된다. 예로, 어머니가 중국 등 동북아 출신이면 그 자녀 중에는 동북아지역학을 공부하겠다는 비전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중앙SUNDAY 미래탐사팀, 2012: 361-362).

최근의 다문화 현상이 농촌과 도시의 소외계층이 결합하여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들에 대한 집단적 차별이나 적대감을 갖는 등 인권침해와 더불어 사회구조적인 모순 표출과 소외계층을 양산시키고 있다. 이주자들을 소외계층으로 분류하여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주자들은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활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전반적인 이해관계 충돌과 한국문화의 균열 초래 등으로 결국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2년도에 2,400여 명의 결혼이민자들에 대해 IT교육을 실시하고 100명을 '다문화 IT 방문지도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사, 육아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

정을 직접 방문해 정보화 교육과 한국사회 정착 도우미 역할을 병행할 계획이다. 컴퓨터 없는 가정에 중고컴퓨터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가정방문하여 지원하는 것이 우리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역차별은 아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활능력 함양을 해치지 않는지도 고려하고 강요된 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이주자, 이들의 가족구성, 소득 및 교육정도 등 생활실태와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여 관리해야한다. 실태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일방적 지원정책은 장래에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기여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은 1930년대 대공황의 재현이 아니라 기존의 경제적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심오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의 경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가 다국적 기업이나 다국적 경제체제, 다국적 경제네트워크에 종속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다국적 경제주체의 활동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다(Alvin & Heidi Toffler, 2007: 32, 163). 이런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다문화사회는 21세기를 이끌고 갈 새로운 환경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자들은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사회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국민의 일 자리를 빼앗고 문화적 혼란과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민단체도 있다. 이는 편견과 오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다문화사회의 세계적 흐름을 간과하고 우리중심의 피해의식이 강한 결과이기도 하다. 넓게 생각해보면 그들이 한국의 부족한 단순기능인력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발전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인력으로서 한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독일·미국·러시아·중국·필리핀 등 다국적 출신으로서 한국에 귀화한 이주자 중에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국회의원, 공무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변호사, 교수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국제이주자들이 어디에 거주하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면서 거주국에 대해 기여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주자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서비스업과 단순노무 분야서 한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3년 6월 현재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비율은 90.6%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9.4%에 불과하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 2013: 6월호). 내국인의 서비스업 종사율은 7.9%인데 반해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종사율은 29.4%이며, 단순노무 종사율도 내국인은 8.3%에 불과한 반면 결혼이민자는 22.8%에 달한다. 이는 3D업종으로 내국인이 기피한 직종에 이주자들이 종사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비경제적 측면을 합하여 비교해 보면 2012년 총비용이 1,614.38억원이고 편익이 2,133.18억원으로 순편익은 518.8억원이었다. 이에 반해 2022년에는 총비용이 4,832.81억원이고 순편익이 6,412.47억원으로 순편익이 1,579.66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순편익이 3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2012년의 경우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총순편익은

표 3. 2022년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비용 및 편익 비교

(단위: 억원)

구분	저숙련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총계
비용	653.65	1456.70	2722.46	4832.81
편익	761.22	2081.80	3569.45	6412.47

자료: 조세현,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분석”,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012-22)

외국인 전문인력이 251.2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학생이 208.60억 원, 저숙련 근로자 5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유학생의 총순편익은 846.99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 625.10억원으로 다음 순이었으며, 저숙련 근로자가 107.57억원으로 가장 낮았다(조세현, 2013: 166-170).

이처럼 2022년에는 2012년에 비해 순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것은 외국인 유입이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증가함으로써, 경기침체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유학생의 총순편익이 더 크다는 것은 앞으로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이민국가인 미국이 세계적인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이 이유는 국제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재능을 발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잘 마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대계 출신 미국인들이 재계, 정계, 언론계 등 각분야에 진출하여 두드러진 활동을 하며 미국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에서 돈을 버는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버는 것 만큼 미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그 결과 미국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다. 앨버트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피버그, 헨리 키신저 등 주요 인물들이 유대계이고, 미국 7대 영화사 가운데 Paramount, MGM 등 6개사를 유대계 출신이 경영하고 있으며, 언론사로는 Washington Post, New York Times, World Street Journal 등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한국계 이민자들도 CEO, 정치가, 변호사, 교수, 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사회에서는 그 구성원이 어느나라 국적인가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분야별로 거주국에 적지 않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고령화가 되거나 실직자로 전락하여 범죄활동에 가담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비용은 이주자라는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어느 사회에서나 내·외국인에 상

관없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6. 다문화갈등 해소를 위한 제언

1) 재외동포 인재확보와 고국 적응훈련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2005년 194천 명에서 2013년 6월 말 현재 56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그들의 출입국절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재외동포에게 사실상 출입국과 체류 및 취업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고,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건강보험,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 등에 있어서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 이외에 우수한 재외동포를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이다. 이주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정책에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중문화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재외동포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이며 지형적으로도 타민족과의 접촉이 힘들었다. 그런데 단일민족의 단점은 세계를 보는 시야가 좁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지방 사람과 어울리는 포용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넓게는 세계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협한 인간관계의 한계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현용수, 2011: 181-182).

많은 국민이 외국인 유입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런 의식이 여러 형태로 표출된다. 예를 들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유형별 배척 정도를 보면 외국인 단순근로자가 35.1%, 국제결혼 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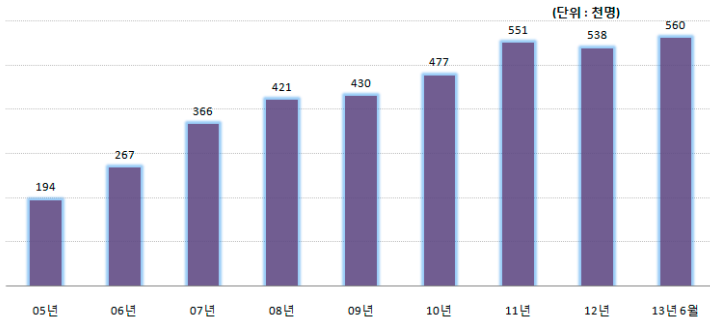


그림 2.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변화추이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자가 34.1%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문기술 외국인 근로자는 24.6%, 유학생은 7.1%로 상대적으로 배척정도가 낮다. 외국인 이민자의 출신대륙별 배척정도는 아프리카 39.4%로 가장 높고, 미주·유럽·오세아니아 24.2%, 아시아 16.5% 순으로 나타났다(매일신문, 2012.1.17).

이러한 문제는 해외에 이민 가서 사는 동포들의 이중문화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재외동포 특히 동포 2세를 껴안아야 한다. 한국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거부반응부터 없어야 한다. 다문화 정책의 결실을 얻으려면 세계 주요국가의 수준에 맞는 인격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다는 세계관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평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남의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먼저 수직적인 내 것을 가꾸고 개발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어느 나라에 가져다 놓아도 그 모양과 질이 손색이 없어야 한다(현용수, 2011: 182).

일본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와 투자만으로 자족하지만 해외동포가 많지 않아 이들을 지원하고 활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중국은 기존 화교사회는 물론이고 새로 형성된 화교사회를 지원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좀 더 주도적인 외교정책도 구사하고 있다(Bertil Lintner, 2012: 256-257). 재외동포의 효율적 활용은 외교력 발휘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다문화 정책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향후 수십 년 안에 미국과 이해관계를 놓고 충돌할 것이다. 이 지역에 밀려드는 중국인 이민의 성격과 화교의 역할에 대해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중국은 이민자를 활용한 외교정책과 세력 확보 정책을 추구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문화정책은 외교정책과 국력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외국인력정책이 단순노동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식·정보사회화에서는 고급인재를 유치하는 정책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전문직업인과 과학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 인력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과학기술 지식이 국가 경쟁력이나 사회정책의 기반이 된다. 또한, 컴퓨터나 광범위한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기능’을 대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21세기에는 정보력·지식력·기술력 및 문화력이 한 국가와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되므로(황인태, 2008: 62-63) 우수인재 확보는 그 만큼 중요해진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는 해외동포의 글로벌 노마드를 활용하는 것은 국제 경험·언어·다문화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또한 우리나라와 해외동포가 거주하는 국가와의 정치·경제·사회의 가교역할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5,500만 명에 이르는 화교들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를 연결하고 무역망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 화교들이 중국에 하는 투자는 중국의 총 외국인 투자의 약 8할을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해외동포에 대한 활용·지원정책과 그들의 역할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수인재 유치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동포가운데는 미국 상·하원에 진출하거나 세계은행 총재 등 고위직을 맡고 있을 정도로 그들의 역할과 위상은 크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위상은 물론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720만의 동포를 네트워크화 할 경우 우리 기업이 세계 각국에 진출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해외동포의 무역망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기업이 세계 어디

를 가든지 그곳에서 쉽게 신규 사업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해외동포들이 상호연계되어 각종 무역연결 등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 성공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도 고려할만 하다.

2) 이주자 자녀의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개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 제24조에서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性), 언어, 민족적 출신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주자 자녀를 위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청소년 상당수가 학교 폭력에 상응하는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이주아동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발음이 이상하다고 놀림을 당한다(41.9%), 빈곤한 나라라고 무시한다(36.6%), 뒤에서 수군거린다(30.6%),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림당한다(25.3%), 자국으로 돌아가라고 협박당한다(21%)』 등 인종과 국적 차별로 인해 어린시절부터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경향신문, 2012.1.9).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0년 인터넷 중독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5.2%가 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 중 다문화 가정 자녀 37.6%가 인터넷에 중독된 반면, 일반가정은 12.3%로 다문화 가정이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적응을 제대로 못하거나 차별을 받는 등 스트레스를 인터넷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상당수가 자신의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들은 공동체생활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기 보다는 오히려 학교와 부모 모두에 대해 증오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

이 어려서부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 자녀들은 성장하여 군복무를 하면서 애국심이 생기고 국가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군입대에 대해 찬반의 논란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일반국민 자녀들과의 교제와 커뮤니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음악·미술·스포츠 등 집단놀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주어야 한다.

한편, 자녀의 현역입대와 관련하여 우선 신병교육대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문화 병사들의 보직과 진급 문제, 병영내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과 상징물 제거, 특정 종교나 이질적인 관습의 수용 등 우리에게 쉽게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산재한 이질감을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군은 이들이 군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거부나 일반 병사와 겪는 마찰, 정체성 혼란에 의한 이탈행위 등의 예방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전문 교관을 편성하고 각급 부대에 전문상담역을 뒤 멘토링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 이런 시점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입영은 우리 군대가 다문화시대를 열어나가는 선구적 역할을 다 할 절호의 기회다(조선일보, 2012.7.11).

이스라엘은 같은 유대계라도 동유럽·중동·북아프리카·에티오피아 등 출신지에 따라 언어와 외모가 현저히 다르다. 이스라엘 군대는 융통성 있는 복무 형태와 전문적 교육을 제공해 여러 이민집단 청년들을 흡수하고 애국심을 키워준다. 다양한 혜택과 높은 수준의 전문교육으로 3년의 군복무 동안 경쟁력 있는 사회인으로 훈련시킨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아랍계, 에티오피아계 할 것 없이 군에서 하나가 돼 전역 후에도 놀라운 단결력을 발휘하며 3년의 시간이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역차별 없는 공정한 지원정책 수립

우리나라에 입국한지 1년 미만의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는 ‘찾아가는 사례관리서비스’가 2012년

2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 제공방식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지역 주민들은 이들로 인해 역차별을 느끼고 있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증오나 차별의식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나친 무료서비스 제공으로 남편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내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인데다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률도 비교대상 19개국 중 꼴찌였다(매일경제, 2012.1.5). 그런데 우리 정부는 ‘찾아가는 사례관리서비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산하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립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연간 650만원의 고용촉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조선일보, 2012.1.11). 우리나라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6위로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결혼이주여성에게만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것보다는 프랑스와 같이 비슷한 형편에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우리국민에게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이혼 등 가정평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이혼은 매년 1만여 명선을 유지하면서 이혼율도 전체 이혼자의 9.3~10.1%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의 이혼을 보면 2008년 7,901명으로 외국인과의 전체 이혼율의 71.9%를 차지했고, 2012년에는 7,878명으로 72.3%로 증가했다.

그들의 이혼 사유는 i) 문화, 언어, 나이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ii) 동남아 여성에 대한 하대(下對)의식, iii) 교육수준과 인권의식이 높아진 이주여성들이 남편과 시댁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반발한 것 등이다.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한국인 남성보다 외국인 여성이라는 인식이 크지만, 한국인 남편의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자녀 양육권이 문제를 비롯하여 이혼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인 남편이

표 4. 결혼이민자 이혼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이혼건수	116,535	123,999	116,858	114,284	114,316
외국인과의 이혼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총 이혼 중 비중)	(9.4%)	(9.3%)	(9.5%)	(10.1%)	(9.5%)
한국남성+외국여성	7,901	8,246	7,852	8,349	7,878
한국여성+외국남성	3,079	3,227	3,236	3,146	3,009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2013.6)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부 측에서 자녀를 낳아 본국에 돌아간 후 한국 남편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아이를 한국에 데려가겠다는 협박사례도 있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등 외국인 결혼여성이 자녀를 빼돌려 이혼을 요구하거나 돈을 뜯어가는 사례도 있다.

한편, 한국의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은 한국인을 역차별 하는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한 선심정책으로 우리나라 일부 시민들이 다문화가정을 부러워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자신들이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오히려 미안해하는 다문화가정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 가정은 주택이나 자동차 소유 여부 등 재산에 따라 보육료지원이 결정되고, 공립어린이집 입학도 길게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은 보육료가 전액 무료이고 공립어린이집 입학도 최우선이다. 그 외에도 정부는 대입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 및 일자리 지원, 무료 건강검진권, 고향방문항공권,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등 27개의 주먹구구식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하고 있다(국민일보, 2012.1.16).

이러한 지나친 정부 주도적 지원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우리나라 적응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정부에서는 이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취업하는 등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여 측면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이주자의 자활능력이 증가할 것이고 우리국민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장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결성은 활성화되고 있고 정부와 고용주에 대한 권리보장 주장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아직 보완할 부분이 상존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주자들은 취업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내국인과 동화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외국인력보다 폭넓은 범위의 내국인과 대체 관계를 가진다(최경수, 2011: 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외국인의 조기 적응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체류자격에 따른 출입국과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헌법과 국제법에 따른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황필규, 2011: 108-109).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 제7조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보수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미래지향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의 현실을 보면 아래 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2년 총 529,690명으로 그 중 전문인력이 50,264명(9.5%)이고 단순노무인력에 종사하는 사람이 479,426명으로 전체의 90.5%를 차지한다(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통계월보, 2013. 6). 단순노무인력은 대부분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도의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단순 외국인력 도입의 범위와

표 5. 취업자격별 체류외국인 수 및 비중

(단위: 명, %)

연도	총계	전문인력(비율)	단순기능인력(비율)
2013.6월	538,477	50,598 (9.4)	487,879 (90.6)
2012	529,690	50,264 (9.5)	479,426 (90.5)
2011	595,098	47,774 (8.0)	547,324 (92.0)
2010	557,941	44,320 (8.0)	513,621 (92.0)
2009	551,858	40,698 (7.4)	511,160 (92.6)

자료: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통계월보(2013.6) 2009~2013년도 통계

인력송출 국가를 결정한다. 어느 국가를 선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주의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담보 가능성,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송출국가들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자국민을 우리나라에 송출하려고 노력하고 자국민은 한국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는 책임감을 가진다.

그들이 당초 취지에 맞게 근로활동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금차별을 배제하는 등 한국에 대해 근로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법적·제도적 자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할 만한 것으로는 당사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국인력 유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5) 대학별·지자체별 상시적 교류시스템 구축

정부는 이민자사회통합을 위해 세계인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이주자와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전시 행정적 실적위주의 지원프로그램이 많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국민이 상시적으로 어우러져 지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국적, 성별, 연령대의 다양성 특성, 사고방식, 문화를 이해하는 '뿔문화 알기' 교육을 통해 '다름'에 대한 조직의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

한, '다양성의 날(Diversity Day),' '다양성 상(Diversity Award)' 등 서로를 이해하는 조직 활성화 이벤트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1: 1, 4). 다양한 인력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국적을 지닌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에 유리하다. 그들은 현재의 다양한 고객과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다국적 국민을 활용할 경우 현지의 정보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진출이 용이할 것이다.

이질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유학생과 지역주민 간 상시적 교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각 대학교에서는 유학생들이 관할 지역의 주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유학생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만의 1:1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상호문화 이해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09: 14).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지역별 실태를 파악하여 교류가능한 주민들과 접촉해야 한다.

한편,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전국 198개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외국인주민을 위한 사회통합지원업무가 중요하다고 보면 서도(86%) 외국인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긍정적 효과 보다는 사회적 갈등·불평등·사회적 비용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었다. 사실 지역 내 거주하는 다양한 외국인이 지역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 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정기선, 2012: 5).

이스라엘 정부는 1948년 건국 이후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조국으로 귀국하기 시작한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모든 아랍인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선거권, 보통교육을 받을 권리,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성별·종교·종전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2012년 현재 770만 명으로 이 중 유대인은 75.4%, 아랍인 20.4%로 구성되어 있다. 남녀 모두 18세에 징집되며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이스라엘은 세계 80개국에서 용병을 유입하고 있어 서로 상이한 언어, 문화, 생활환경 속에 있지만

이주민들을 유대사회의 시민으로 재교육시키고 있다.

7.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사회의 갈등은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차별 등으로 인해 이주자와 국민이 서로를 불신하고 불쾌한 이질감을 느끼면서 발생한다. 갈등은 이주자의 욕구와 국민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발생하기도 하고, 결혼생활을 통해 가족 내에서의 이해부족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이주자에 대한 인종차별과 임금차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만을 강조하고 이해시킬 것이 아니라 외국의 이질적인 문화를 우리 국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근로현장에서의 동등한 임금 지불과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 갈등의 해소는 국민이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에 달려있고, 정부는 사회통합차원의 인종차별과 국민 역차별이 없는 다문화 정책을 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은 이주자에 대한 민족적·인종적 편견을 극복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주자들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국가에 헌신과 기여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의 기본정신은 이주자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거주하면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과 이주자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초·중·고교생과 군인 등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 전문강사 육성, 초중고 교과과정에 다문화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확대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외국인의 유입은 동포, 취업, 결혼, 유학 등 다양하 유형으로 다문화사회를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내국인의 견제를 받는 작용을 한다. 이는 다문화갈등을 초래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이민자 집단과 주류 집단이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상호 통찰을 경험할 수 있게되고, 그 과정에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결국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가 사회적 편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2013.10.14 접수, 2013.11.25 수정, 2013.12.26 게재확정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2.01.09, 10명 중 3명 외국인 무시해 학교가기 싫어요.
- 국민일보, 2012.01.16, 한국 다문화가정지원 엔터리 역대 연봉자에게도 보육료 줘, 2013.07.05, 해외 고급인력 유치 힘써야.
- 김도혜, 2012, 현대사회와 다문화-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분류와 관련 정책의 한계점: 미국 사례와 비교,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2), 316-319.
- 김판준, 2012,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다문화정책의 과제, 성결대학교 다문화와 평화, 41-42.
- 김혜란·최운영, 2013,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대장간 출판, 14, 192.
- 매일경제, 2012.01.05, 한국 성장률 높지만 사회통합 낙제.
- 매일신문, 2012.01.17, 국민 64% 외국인 이민자 소요우려.
- 삼성경제연구소, 2011,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진단- 노동력 부족, 생산력 저하, 세대간 일자리 경합, CEO Information 815 (b)창의와 혁신의 원동력, 인력 다양성 관리, CEO Information 822.
- 서정명, 2012, 당신을 초대할 삶에 충실하라, 함께북스, 102.
- 유경준·김정호, 2010,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문제, KDI정책포럼 226, 7.
- 전해영, 2010, 잠재성장률 2% 제고를 위한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8-9.
- 정기선, 2012,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정책을 바라보는 시군구 공무원들의 생각, IOM 정책연구원 뉴스레터.

- 조선일보, 2012.01.11, 1년 미만 이주여성은 여성부서 방문교육 복지시설 등 취업지원, 2012.06.16, 다문화시대에 군이 풀어야 할 과제들, 2012.07.11, 다문화 군대는 최고의 다문화 교육장.
- 조세현, 2012,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분석,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22, 166-170.
- 중앙SUNDAY 미래탐사팀, 2012, 10년 후 세상, 청림출판, 361-362.
- 최경수, 2011, 외국인력 및 이민유입의경제적 효과, KDI 정책포럼 239, 7.
- 현대경제연구원, 2009, 경제주평-국내 다문화 현상의 특징과 시사점, 2010, VIP REPORT-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시사점.
- 현용수, 2011,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쉐마출판, 181-182.
- 황인태, 2008, 글로벌경제 대이동, 미래문화사, 62-63.
- 황필규, 2011, 한국이민정책의 이해-이민관련법, IOM이민정책연구원, 108-109.
- Alvin & Heidi Toffler, 2009, 불황을 넘어서, 김원호 옮김, 청림출판, 32, 163, 193-194.
- Bertil Lintner, 2012, 차이나 브라더스, 이은진 옮김, asia 푸른숲, 256-257.
- Daniel Altman, 2011, 10년 후 미래, 고영태 옮김, 청림출판, 13, 111-113.

Study on Conflicts and Contribu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Pan-Joon Kim*

Abstract We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which there are 1.53 millions residing in Korea. Under the circumstances,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multicultural society are more activated than ever and the assistance of the government is positive.

The history on the migrants social integration policy is only a short time, and, due to the financial and environmental limits, the multicultural policy in a social integration level has not been implemented, but has been made with married migrants as the assistance objects. Besides, its policy has been attacked because of bilateral assistance instead of the graded assistance and overlapping assistance among government organizations.

In order to succeed in a multicultural policy, the government need to specially cope with and adapt itself 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the policy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by dividing their roles.

Constituents of multicultural society have been various ranging to politicians, professors, government officials, married migrants, students, investors etc., from pure labor field of the past. Furthermore, the increase of migrants changes into the circumstances which cannot escape the racial and cultural conflict as well as making up for the lack of economic activity population.

Until now, the discussions were centered on pointing out problems, but from now on it will have to focus on presenting alternative ideas. Because only to point out problems without substitute proposals is likely to end in an empty talk, the

* Daegu Immigration Office, Keimyung University, Migration and Multicultural Studies, charleskjp@hanmail.net

government need to positively consider and listen to a variety of rebukes and proposals.

The future immigration policy should be that of social integration level and should consider making use of overseas ethnic Koreans as professional talents. While the past immigration policy was regulations and control by focusing on border inspection and stay management, the future policy will be inovated into the complex policy including social integration and economic effects.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is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consider the effects etc., of education, identity, and military forces entry, of migrants children, with various points of view. The multicultural society is the flow of unavoidable world and reasonableness, and has not a littl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ccordingly, any nations have expected the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For that, migrants and original residents are to recognize and engage different cultures each other, and the government need to develop and assist a variety of programs.

Keywords_Multicultural society, population, workforce reduction, migrant, integration policy, multicultural policy